

# 이재명 동행 민주 지도부, 성남FC 의혹에 “보복수사” 주장

당 지도부, ‘제3자 뇌물죄 아냐’ 한목소리  
“정당한 계약 의한 광고 집행...관여 안 해”  
“尹 경쟁자이자 野 대표 대한 보복 수사”  
“법정에서 진실...檢, 김건희도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와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대표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다”며 “과거 미르세

단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건어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말 그대로 후원이 아닌 정당한 계약에 의한 광고 집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유용된 것일뿐더러, 광고 수주와 관련해 이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었으면 과연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나왔을까 싶다”며 “성남FC 건만 놓고 봐도 이미 끝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대선이 끝나고 나니깐 끄집어내서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를 가정사실로 해놓고 꿰어맞추기식으로 가고 있지만, 이 대표의 말씀처럼 향후 법정에서 진실이 반드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이재명을 거론하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정치적 재미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며 “검찰 사유화라도 모자라 검찰과 짝짜꿍이 된 집권여당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와 동행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의 아내라고 예외일 순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나. 국민과 함께 물으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



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네이바·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당직자 등 40여명이 넘는 당 인사들이 동행했다. 진보·보수단체들도 검찰 앞에 대거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최이슬기자

## 민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거로의 퇴행”·“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두고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한다”며 “개혁이라 말하고 퇴행만 거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조 패리기만 골몰한다”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찌 구니가 없다”고 했다. 또 “귀족 학교를 만들고 일제 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게 개혁인가”, “독재 정권 국민정신 교육을 방불케 하는 자유주의 이념 교육이 미래 교육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금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나”라며 “노동, 교육을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 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갈라치는 건 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 새 정책, 기민한 선제 대응”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지방대 육성권 한 지방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꼼꼼히 살펴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니, 새롭게 구체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대학 규제를 대거 풀어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 지방 이양 업무로,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상 부담이

지방대 육성·공공기관 이전·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준비 철저히

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교육청·대학 등의 의견을 듣고 철저히 분석해, 도 차원에서 할 일과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잘 챙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대 육성권한 이양뿐 아니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처럼 지방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건의하자”고 말했다. 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농협중양회처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 전남이 유치하도록 전담팀을 운영해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프로젝트 준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남해안

일대를 글로벌 해양관광지로 만들려는 전남과 부산, 경남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3조원대로 확대기로 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프로젝트와 시·군 계획 등을 잘 다듬어 일선 시·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2024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철저히 준비해 4~5월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본은 처음 시작한 2008년 820억 원대에 머무르던 기부금이 요즘은 1000배 늘어난 8조 원대로 급성장한 것을 거울삼아 모든 실국에서 관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50년만의 최악의 가뭄과 관련해 “섬지역 광역상수도망 신속 구축 등을 비롯한 항구적 대책을 포함해 적극 대처하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